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5/18 통권 157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牌**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변화를 꾀한다(1)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복수소득자의 무기장, 불성실회계장부의 가산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함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 슛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파생상품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

개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범위	모든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직전 1년간 공급가(매출액)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2021년부터 변경)
과세기간	1기(1.1 ~ 6.30)	2기(7.1 ~ 12.31)	1년에 한번 통합신고(1.1 ~ 12.31)
신고시점	7월 25일	1월 25일	매년 1회 1월 25일
세금계산서	모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매출 4800만원 미만자는 발행 불가 · 직전매출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까지는 발행가능
납부세금	매출액×10% - 실제 매입액×10%		매출액×업종별 부가이율×10% (부가율 : 전기가스수도 5%, 소매·음식점 15%, 제조·농·임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 기타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40%)
예정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3개월 단위 예정고지 · 법인 중에서도 전 6개월 매출 15억 미만시 3개월 단위 예정고지 		전년도 세액의 50%를 상반기 6개월에 종료 후 7월 25일에 6개월 단위 고지납부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1호 / 주간 20호

2022. 5. 18.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복수소득자의 무기장, 불성실회계장부의 가산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함	2
C E O 에 세 이	CEO는 변화를 꾀한다(1)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 폐차 후 발생 수익 - 여행사 수수료 처리 문의 드립니다 - 회사에서 오피스텔 임차 시 계산서 발급여부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 보유세에서의 공시가격 활용 - 서울시 제안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따른 세율체계 개편	10 11
직 장 인 Survival	같이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재능을 찾아라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60, 2021.07.26)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 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 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89, 2021.11.04)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1년간 한시 중단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파생상품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함	13
세 무 정 보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영수증 신고·영수증만 보고 따라하면 끝	16 34 41
회 계 정 보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복수소득자의 무기장, 불성실회계장부의 가산세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함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1. 복수소득자 : 개인의 경제활동이 다원화,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경제활동으로 추가소득도 창출하여, 일반적 근로소득 외에도 소규모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여러 가지 소득 발생됨.
2. 사업소득 :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실제 소득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소득가산배율 2.8배나 3.4배)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산세가 적용됨.
3. 각종소득 :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이전 총액소득임, 근로소득은 회사(지급자)의 연말정산 소득에 의함. 기타소득은 법정필요경비(60%, 75%, 또는 80%)가 자동 적용됨.
4. 가산세 없음 : 실제기장의 사업소득+각종 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음.
5. 가산세 계산 : 사업소득을 실제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사업소득 해당액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됨(소득세법 제81조의5)

$$\text{가산세} = \frac{\text{종합소득} - \text{최종 산출세액}}{\text{추계종합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금융소득 총액} + \text{기타소득}} \times \text{추계종합소득(실제기장이 아닌 경우)} \times 20\%$$

6. 해당 소득세법 제81조의5 규정

●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 ·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 ·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

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00\text{분의 } 20$$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6일 (금)	5월 9일 (월)	5월 10일 (화)	5월 11일 (수)	5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261.80	1272.70	1274.60	1275.50	1277.00
일 본 엔 (JPY)	968.94	973.87	977.57	978.48	982.95
캐 나 다 달 러 (CAD)	983.44	985.29	979.18	979.12	982.95
홍 콩 달 러 (HKD)	160.75	162.13	162.38	162.49	162.68
위 안 화 (CNH)	189.72	189.74	188.87	189.34	189.27
유 로 화 (EUR)	1330.13	1340.92	1345.85	1343.55	1343.02
호 주 달 러 (AUD)	898.02	897.38	886.48	884.75	886.05
싱 가 폴 달 러 (SGD)	911.38	917.43	916.39	916.93	918.80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90.17	291.24	290.77	291.08	291.79

CEO는 변화를 꾀한다(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상이 변했다. 따라서 기업도 세상과 고객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당한다." 잭 웰치의 경고다. 중성자탄이란 별명까지 들어가며 잭 웰치는 GE란 거대 함정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마치 구멍가게를 운영하듯 거대기업을 요리했다. 그래서 수백배로 기업가치를 높였다.

성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가 변화해야 한다. "기업은 열 냥, CEO가 아홉 냥"이라는 말도 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CEO의 비중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CEO의 솔선수범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조직과 구성원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CEO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의하면 경영의 열매인 이윤이란 바로 '창조적 파괴 행위', 즉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대가라고 했다. 톰 피터스의 지적처럼 CEO는 파괴의 지도자 CDO(Chief Destruction Officer)다.

이렇게 창조적 파괴, 즉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CEO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가 중요하다

첫째, 군림해서는 진정한 리더로서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진정한 리더십은 낮은 곳에 있다. 그래야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힘은 산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 시대의 영웅 항우를 누르고 제국을 건설한 유방도 스스로를 낮추었다. 지혜는 장량만 못하고 정치는 소하만 못하며 군사 작전에서는 한신만 못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구사했다.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었다.

둘째, 약간의 성공에 따른 카리스마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 성공한 CEO는 종종 카리스마의 편안함을 이용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카리스마는 그것을 부정할 때 생긴다.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한 지점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회의 중이던 지점장은 행장을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김정태 행장은 당연하다는 듯 기다리다가 지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보수적인 은행가에 신선한 얘기꺼리로 돌아왔다. 체면을 버리고 서로의 강점을 엮을 때 비로소 혁신을 이루어진다.

셋째, CEO가 가장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실적을 창출하려는 열망에 불타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 한국을 월드컵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지도력의 핵심을 무엇인가? 지연, 학연을 배제한 실력 위주의 선수 기용, 위치에 맞는 선수 발굴, 선수들끼리 경쟁심 유발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곧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는 확신과 열망으로 선수들을 감싸고 연대했다는 점이다.

변할 것과 변하지 말 것 구분해야

넷째,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야 한다. 진리, 생명의 존귀함, 인격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 사랑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언제까지나 지켜야 한다. 환경을 존중하고 기술의 진보가 생명의 번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스타를 인정하고 성장을 도와 주어야 한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수의 이노베이터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이들보다 일탈적인(deviant) '모가 난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진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월트 디즈니나 스피버그 같은 한 명의 창조적 일꾼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다.

여섯째, CEO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공개할 용기가 중요하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인 CEO의 의사결정과 판단이 항상 정확하고 유익하다는 보장이 없다. 이때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과감히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경영, 투명경영의 토대가 된다. 실수를 인정하고 오히려 격려할 때 혁신적 기업문화가 싹튼다. 일테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M이 대표적이다.

일곱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취할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 Q**
- 건물 렌트 기간 : 3년
 - 렌트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 3천 (21년 8월에 발생하여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처리 중)
 - 종료 시 발생할 인테리어 복구 비용 : 1천 - 24년 종료 시점에 발생 예정
1. 위의 정보에 따라서, 현재 자사는 렌트한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이때 렌트 종료시에 발생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테리어 감가상각 시작 시점에 임시 비용으로 잡고 함께 감가상각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료 시점에 비용처리 하나요?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1번의 답이 임시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면, 실제 종료 시점에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는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차액에 대한것은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임시 비용으로 처리 할 때 실제 비용과의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A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래의 형태로 원상복구 해주기로 계약을 한 경우, 완료시점에 복구해주는 비용은 종료시점에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차 후 발생 수익

- Q**
- 우리원에서 진행한 폐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현황)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진행하였으며,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폐차 완료 후 발생하는 수익(차량에서 나오는 고철 등))
 - (질의사항) 폐차 후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 구원 철스크랩(고철거래)계좌로 입금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은 고철 거래시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여행사 수수료 처리 문의 드립니다

- Q** 여행사 통한 예약 매출에 대하여 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계약에 의하여 20%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호텔은 여행사로 부터 전체 매출에 대하여 선 지급받고,
호텔은 후에 매출의 20%를 계산하여 경비로 여행사에 지급 하는 방법 (매출, 경비 구분) 대신에,
예약 시에 여행사에 호텔 매출의 20% 할인율을 적용시켜 할인 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발생 매출에 대하여 호텔은 여행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출이 감소되는 대신에, 경비가 없는 것으로 기록)
- A** 회계는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일종의 분식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수수료 20%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오피스텔 임차 시 계산서 발급여부

- Q**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 시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거래증빙없이 월세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 A**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대상인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임대료를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 보관하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 적용되었으며,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로써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frac{\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text{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자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내용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된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주요 사업내역·수입금액 검토·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확인의무 위반시의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택 보유세에서의 공시가격 활용

세목(근거 조항)	내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 - 과세표준 = {합산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기본공제(주택분): 일반 6억원, 1주택자 11억원, 법인 미적용
재산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 - 과세표준(주택분) = 개별주택 공시가격 × 60% ※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별로 과세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①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은 제외)
 - ③ 법인세법상 임원
 -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⑤ ④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4대보험료 미납자
 - ⑦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만 해당)



서울시 제안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따른 세율체계 개편

과세표준	표준세율(현행)	과세표준	표준세율(개정)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9억 이하 (공시 1.5억)	0.1%
0.6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0.9 ~ 2.7억 이하 (공시 1.5억 ~ 4.5억)	9.0만원 + 0.9억 초과분의 0.15%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2.7 ~ 5.4억 이하 (공시 4.5억 ~ 9억)	36만원 + 2.7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 (공시 5억 초과)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5.4억 초과 (공시 9억 초과)	103.5만원 + 5.4억 초과분의 0.4%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개요

분 야	주요 과제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국산 인버터에 대한 국제성적서 인정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탄소중립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배출권 부가세 면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오나화
코로나19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난 심화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요건(고용유지요건) 완화 택배업 증차 규제 개선 및 외국인 고용 확대
고물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프타 원유 할당관세 0% 적용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 완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 신고제 개선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 힌지 높이 규제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택시 사용연한 제한(차령제도) 합리화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재능을 찾아라

“나는 나를 넘어섰다”는 카피로 주목받은 국내 자동차광고 모델 김민철씨는 헤비급 레슬러에서 모델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초등학교때부터 또래보다 덩치가 좋았던 그는 당시 인기높은 씨름부에 들어갔는데, 6학년때 LA올림픽에서 김원기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고 주목받는 것을 보고는 오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꿨고 곧 레슬링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레슬링이 비인기종목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멋진 포즈를 취하는 패션모델을 보고는 모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에서는 “레슬링밖에 모르는 녀석이 무슨 모델이나”며 반대가 거셌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스포츠센터에서 코치로 일하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던 그는 고민 끝에 사진 몇 장과 뮤직비디오 한 개를 들고 프랑스로 날아갔다.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무작정 떠난 파리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 남자모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파리 오프꾸뛰르 무대에 섰다.

성공하려면 어떤 일에 미쳐야 하고, 그러려면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되는 일이 하나 없다고 투덜대는 당신, 잘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 성공 경험이 없는 당신, 이겨본 적이 없는 당신이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찾으면 경쟁력이 될 다이아몬드를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상구 [1년만 미쳐라]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파생상품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5081, 2021.08.12

■ 질 의

- '21.7.26.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한국거래소(KRX) 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 만기 유렉스 연계 달러선물이 상장될 예정

질의내용

- 한국거래소 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 만기 달러선물을 유렉스 연계 야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60, 2021.07.26

■ 질 의

- 신축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받는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

■ 회 신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잔금 지급 전에 해당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이하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잔금은 부동산이 준공되어 최종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종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89, 2021.11.04

■ 질 의

- A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칭으로 적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507, 2021.11.11

■ 질 의

- 사업자가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 국립대학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8항에 의거 종전 공립학교 지위로서 사업자에게 받는 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20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국립대학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중단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면서도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기업활동 지원" 일환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내리나...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율조정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세율 변경은 국회 동의로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이를 국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2022. 5

- (신고개요)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 30.(목)까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수)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 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고검증)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¹⁾와 모바일²⁾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 5. 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 6. 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 (신고방법) '22. 5.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II.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1. 비대면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납세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

-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제공)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 *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
 -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 · 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원클릭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 ·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One Click)」 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 참고1: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 · 납부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확대 등

- (신고편의 제고) 모바일 기기(손택스,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 · 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 · 비사업소득(근로 · 연금 · 기타소득)도 ARS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 6천만 원 이상, (음식) 3천6백만 원 이상, (임대) 2천4백만 원 이상 등



I 모바일·ARS 신고 서비스 I

구분	종전	확대
모바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ARS 전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가 가능한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 대화형 신고 예시 I

-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 예 ● 아니오
- ⇒ “예”인 경우 자가용 적용, “아니오”인 경우 타가용 적용

2.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 (이용시간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합니다.
* 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 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가능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얼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내비게이션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 자기검증 서비스 내용 I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비교
기납부세액	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중복입력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확인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
농특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소득종류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 *(예시) 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3.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 (추진배경)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수)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2. 6. 30.(목) → '22. 8. 31.(수)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
-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우미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 I

구분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①	손실보상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②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③	영세 자영업자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4.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만 원 미만인 경우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환급사례)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I 환급 사례(1) I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7,270원임 * 1천8백만 원 ×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수입금액		18,00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14,292,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2,208,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132,480원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42,480원
	기납부세액	(-)	54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7,52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9,750원

I 환급 사례(2) I

사례설명	계산내역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5,600원임 * 2천3백만 원 ×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수입금액		23,00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14,191,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7,309,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38,540원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348,540원
	기납부세액	(-)	69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41,46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4,140원

I 환급 사례(3) I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5,190원임 * 1천9백만원 × 3.3% = 627,000원 [소득세(570,000원)+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수입금액		19,000,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14,003,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3,497,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209,820원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119,820원
	기납부세액	(-)	57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50,180원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5,010원

- (환급안내) 환급 대상자에게는 5. 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공통 도움자료)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보제공 확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동·단독)**로 제공합니다.
 - * (종전) 중간예납세액만 제공, ** (종전)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기준 제공
-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I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I

-
- ☒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안내
-
- ☒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
- ☒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
-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

-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2) ①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 ③ 위택스 이동
 -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창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단순경비율(F·G유형)·종교인소득(Q·R유형)·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V유형)자 등에게 지방소득세액·납부방법·신고창구 주소 등 자치단체 납부 안내사항이 함께 표기되어 발송
 -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1661-8880)를 운영(5월) 합니다.
 -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① 기장의무

업 종 별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6억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미만자	1.5억원 이상자	3억원 이상자	7.5억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자	7천5백만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5억원 이상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적용

② 추계신고

업 종 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 1)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2)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3)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등이 해당

참고 2. 세법 개정사항 요약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 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서화 ·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 § 12, § 21, 소령 § 41⑧)
 - 계속적 · 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① 서화 · 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 ② 서화 ·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 § 12, 소령 § 17의4, §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 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 § 12, 소령 §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 § 52④, ⑤, 조특 § 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 52⑤, 소령 § 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 § 55①)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 § 81의11)
 -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 17①,③)
 -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 § 17)
 -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 § 17의4, § 12, § 18, § 38)
 -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 ·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 ·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 § 123)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 § 131의2)
 - － 결정 ·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 (조특법 § 96의3①, 조특령 § 96의3⑤)
 - － (세액공제율) 50% → 70%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 126의2)
 -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 16)
 -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연구원

-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 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 29의7, 조특령 § 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 § 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 ·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 8의4, 조특령 § 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 96의3, 조특령 § 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 81의10, 소득령 § 147의6)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려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 · 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 78의3④,⑤, 소득칙 § 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 23, § 57)
 - 이자율 연 1.8% → 1.2%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 § 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 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

참고 3.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p>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p>※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참고 4.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1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 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 (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0.1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 /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 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 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 액)×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2022. 5

- ①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② (개정 사항) ❶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❷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❸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 ❶: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既 발표
 - ** ❷·❸: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 ③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❶~❸)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참고 1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❶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 분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 가액	양도 차익	보유 기간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15억원	5억원	10년	2억 7,310만원	1억 3,360만원 (중과대비 △1억 3,950만원)	3억 2,285만원	1억 3,360만원 (△1억 8,925만원)
20억원	10억원	15년	5억 8,305만원	2억 5,755만원 (△3억 2,550만원)	6억 8,280만원	2억 5,755만원 (△4억 2,525만원)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 (문제점) ①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②주택매매 장애요인 > 매물감소 및 시장 불안
- ①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② 주택거래량(서울, 만건): ('17) 18.8 > ('21) 12.7

☞ (기대효과) ①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②6.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증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출회 활성화 가능

- ①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 ②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기간('19.12~'20.6월)중 주택거래* 증가 > 금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되므로 더 큰 매물출회 효과 기대

* 주택거래량(만건): ('18.12~'19.6월) 37.0 → ('19.12~'20.6월) 73.9 <+99.9%>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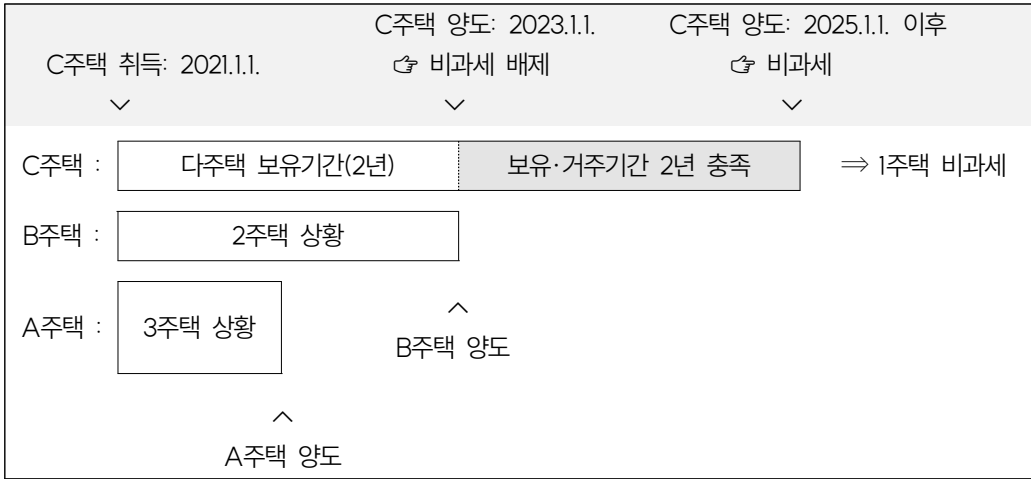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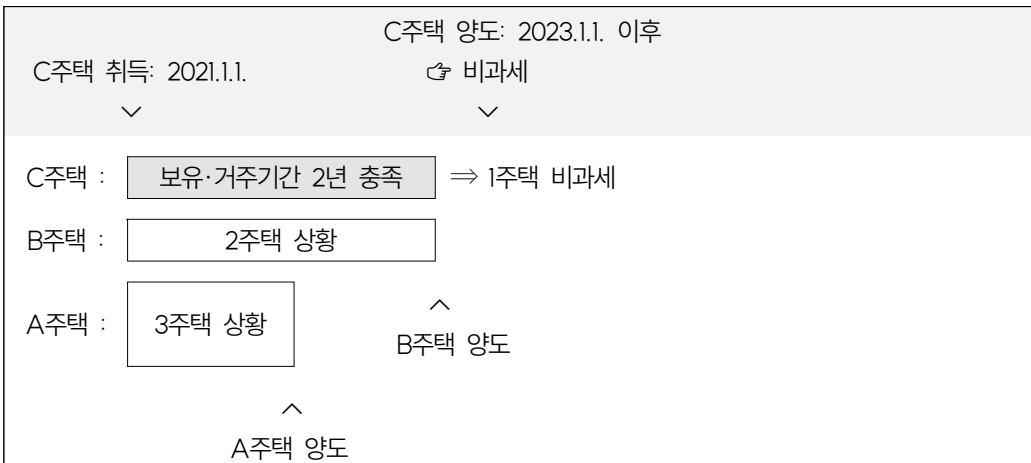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023.1.1.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보유·거주기간 재가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가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②재가산된 보유·거주기간 총족 시점까지 매물출회 지연

- ①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가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 ②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 동결

☞ (기대효과) ①세제 정상화, ②매물출회 유도

- ①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 ②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종전주택 취득 : 2018.1.1.	종전주택 양도: 2021.12.31. 이전 ☞ 비과세	종전주택 양도: 2022.1.1. 이후 ☞ 비과세 배제
▽	▽	▽
종전주택 : <input type="text"/>	일시적 2주택 상황 : 1년 허용	<input type="text"/>
신규주택 : <input type="text"/>	^	
신규주택 취득: 2021.1.1.		



-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 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종전주택 취득 : 2018.1.1.	종전주택 양도: 2022.12.31. 이전 ☞ 비과세	종전주택 양도: 2023.1.1. 이후 ☞ 비과세 배제
▼	▼	▼
종전주택 : <input type="text"/>	일시적 2주택 상황	
신규주택 : <input type="text"/>	: 2년 허용	<input type="text"/>
	^	
신규주택 취득: 2021.1.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 (문제점) ①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②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 ①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②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 (기대효과) ①현실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②납세자 편의 도모

- ①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 ②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참고 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❶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67의3①12의2, § 167의4③6의2, § 167의10①12의2, §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분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❷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54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p>* 이사·상속·동거분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p>	<input type="checkbox"/>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단서 삭제></p>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p>*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p>	<input type="checkbox"/>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 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최대 2년)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삭 제> </div>
---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 국세청, 2022. 5

1 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 제공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 (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
 -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①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②공제항목 입력 및 ③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합니다.
 -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을 따라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납세자 맞춤형 숏폼 영상 제공

유형별 신고 방법

- ①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 G유형 자동응답전화로 초간단 신고하기
 - 올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G유형)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한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환급계좌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F유형 자동응답전화로 초간단 신고하기**

-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 모두채움 대상자(F유형)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납세자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③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주택임대 분리과세 모두채움(V유형)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V유형)의 자동응답전화 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④ 과세기간 중에 이직을 한 근로자 신고 방법**● 김국세의 슬기로운 이직생활(복수근로 소득자)**

- 과세기간 중에 직장을 옮겼으나 기존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복수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⑤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 D유형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D유형)가 제출·보관해야 할 각종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사례를 통해 실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모두채움이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추계액 신고)**

- 홈택스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E유형)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제 및 홈택스 활용 방법 등**⑦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 요청 방법****● 원격지원상담**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원격지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⑧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 특별세액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제 항목 입력 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⑨ 전자신고 기부금 입력 방법

● 종합소득세 기부금 입력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기부금 입력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⑩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출력하는 방법

● 세무서 방문없이 지급명세서 출력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각종 지급명세서(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다양한 채널에서 숏폼 영상 시청 가능

- 보다 많은 납세자가 숏폼 영상을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참고 1 “숏폼 영상 검색 방법” 참조)

- (국세청 누리집) 올해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숏폼 동영상」 코너*를 신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숏폼을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

- (홈택스) 홈택스에서도 신고서 작성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 배너*를 게시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 (유튜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도 숏폼 영상을 게시하였고, 종합소득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을 방문하시면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 교육 동영상을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 납세자세법교실 > 세법의 이해 > 소득세법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납세편의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납세자 문의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 및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 금융감독원, 2022. 5

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

개정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시행)되었습니다(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 별첨 참조).
-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을 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1.24.일 보도자료)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4.28.일 보도자료)

- 이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시행령 § 16②, 규정 § 14⑨)

- (현행)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
 - 이에,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매칭하는 방식
 -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
 -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 ※ (사례) '17년 A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4,070점 부과
 -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마련 (시행령 § 29, 규정 § 23⑦)

- ☐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규정 § 8의2)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①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 (규정 별표4)

- ☐ (현행) 지정감사(2~3년)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 ☐ (개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 (참고 예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감사인 예시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A사유발생 (3년)	B사유발생 (3년)	C사유발생 (3년)			
(현 행)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감사인A</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감사인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감사인C</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 → 총 지정감사기간 5년 </div>					
(개선안)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감사인A</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감사인D</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 → 총 지정감사기간 5년 </div>					

②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정 § 14⑧)

- (현행)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 · 지정제외점수 부과
 -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③ SPAC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 § 12②)

- (현행)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은 과거 재무기준을 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을 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 (개선)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정 § 23)
 -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받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령 § 28①, 규정 § 22②)
 -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받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사항 추가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향후 감독방향

-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 *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 등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